

〈제 72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전남경찰청에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성금 1천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이충호 전라남도경찰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한 1천만원의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남지역 범죄 피해자들의 생계비 및 의료비, 심리상담,

법률 비용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지역 곳곳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며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 AutoLand광주

◆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 개최



기아 AutoLand광주 노사는 지난 10일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2023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문'을 공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아 10대 안전수칙 해설서를 배포했으며, 10대 안전수칙에는 규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안전 방호장치

임의 해제·우회 금지, 위험행위 요소 발견 시 선조치 후 즉시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은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다져 더 안전한 기아로 나아가는데 협력하기로 다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아만의 최적화된 안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592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 최윤식(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주제 : 한국, 위대한 반격의 시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지난 2월 17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최윤식 아시아미래연구소장을 초청「한국, 위대한 반격의시간」을 강의주제로 159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위기적 요소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들로 변화되고 미래의 기회요인과 그 기회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회요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위기요소는 전 세계 기준금리를 주도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 했을 때, 경제가 연착륙 하면 미국 외 국가는 어려워 진다. 현재 미국의 소매 지표, 고용지표, 생산자 지표,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으며, 연착륙을 넘어 노 랜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하드랜딩을 해야 금리가 빠르게 내려간다. 만약 노 랜딩을 하게되면 5%이상의 금리가 2년 이상 지속될 확률이 있으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 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 카드를 사용하기 부담되는 상황이다.

위기 요소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 시스템 구조에 있다. 우리 기업의 제조업이 도약해서 무역 강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고 내수 소비를 증가시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통해 세수확대를 통한 정부의 사회 안정망 시스템이 안정되는 구조로 나아가야한다. 즉, 한국은 제조업 무역 강국 시스템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기를 피할 수 는 없지만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기업에게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시작 되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 산업이 3차 산업 혁명 초창기처럼 막대한 유동성을 품고 있지만 첫 번째 곡선이 붕괴 되는 상황이다. 경영자 라면 경제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 다음에 나타나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한다. 핵심은 대표적으로 미래 자동차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떠올리는 미래 자율주행 수송 장치는 전기자동차를 떠올린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원이 바뀌는 정도다. 미래 싸움은 전기자동차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되면 전 세계 TOP10이 결정되고 다른 기업은 전부 다 사라질 거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경쟁이 아직 초기로 4~5년 후 이슈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 선두권 그룹에 올라설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만약 한국이 미래 자동차에 경쟁력을 잃어 자동차를 못 만드는 한국의 제조업은 IMF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한국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최소 세계 TOP5에는 들어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이 게임체인저 인데 인공지능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II. 광주경충 소식

들어간다. 즉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는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된다. 한국이 3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했듯이 미래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번역의 시기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기업들이 위기의 안개가 걷힌 뒤 시작될 미래 산업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큰 기회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한국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사무국 일지(2.13 ~ 2.17)

2.13 (월)	● 중장년내일센터 특화사업 운영	2.15 (수)	● 제76회 이사회, 제43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14 (화)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 13기 드림만남의 날 행사(~16)	2.17 (금)	● 제1592회 금요조찬포럼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 경총 등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
- 개정안은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겨, 1년 내내 노사분쟁이 이어질 것
-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
-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아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

-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월 20일(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5일 야당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제계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을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 밝혔다.
- 또한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III. 노동경제동향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청구하라는 것으로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 경총은 2월 15일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한 모든 기업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보았다.

- 주요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되면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 장기화될 것(93.3%)’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90%)’라 평가했다.

- 2월 21일(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경제계는 국회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고 밝히고,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